

정부의 대북「햇볕정책」: 북한 및 주변국의 반응과 언론·학계의 역할

崔 春 欽*

목 차

- I. 서 언
- II. 대북 정책기조 : 햇볕정책
 - 1. 햇볕정책의 기본 골격
 - 2. 햇볕정책의 역사적 성공 사례
- III.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 및 주변국의 반응
 - 1. 북한
 - 2. 주변국들의 반응
- IV. 언론, 학계 및 정부의 역할
 - 1. 언론 및 학계의 역할
 - 2. 정부의 역할

I. 서 언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아직도 해빙의 무드보다는 대립과 상호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되었던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통일전선전략,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경제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대남 포쇄정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한민족 공동의 염원인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에 남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인권보장,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으로 남북관계 개선 표방을 햇볕정책의 기치아래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본 연구는 우선 햇볕정책의 본질을 설명하고, 북한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한 다음에 국민들의 통일논의(햇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언론과 학계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북 정책기조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기본 골격

간단히 말해 햇볕정책이란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한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자는 대북정책이다. 중·대만 관계 혹은 과거 동서독관계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보다 많은 접촉, 대화, 협력을 한다면 북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책이다. 햇볕정책과 관련,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 핵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화해·협력정책)을 통하여 한국정부는 :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를 위해 기존의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둘째,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하에 교류·협력을 (북한당국 및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며,¹⁾

셋째,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가지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있는 부분 중 남북한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천한다. 둘째, 「정경분리」의 신속적이고도 원활한 적용아래,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을 증진시켜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와 4자회담²⁾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남북대화는 주로 남북간 상호불신을 축소하여 화해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정립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2. 햇볕정책의 역사적 성공 사례

햇볕정책이 정책실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된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남북한 양측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냉전시기 당시 미국의 대중, 대베트남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와 중·대만간 교류·협

1)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연구기관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비용보다 단계적 통일시에 드는 비용은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제3차 4자회담개최(1998. 10. 21 제네바 예정)와 관련, 북한은 “이번 제3차 4자회담에서도 문제해결의 근본으로 되고 있는 미군철수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집중논의 해야 함”이라고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실현성있는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력의 심화로 양안관계가 개선된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말 모택동이 주도한 文化革命 時, 중국군부내 대미 강경파의 입지를 축소하고 등소평을 위주로 한 개방파를 옹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 포용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개혁을,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급기야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중·미 밀월관계를 1980년대 말까지 근 10여년간 지속하였다.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사건으로 인해 미·중 양국관계는 소원해 졌으나, 1997년 10월과 1998년 6월에 개최된 두 번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협력관계로 진입하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부분은 근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 시킨다면, 즉 대북한 햇볕정책을 지속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입지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것 역시 미국의 대베트남 포용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1979년말 중국의 침공으로 인해 베트남은 구소련에 경도되는 외교정책을 전개, 대미 강경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의 포용정책을 이해하고 대미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국력이 점진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중·대만간의 교류협력 역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기본틀을 가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안간 경험과 교류는 처음에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상대방의 호혜적인 반응과 조치를 유발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실제적으로 양안간 인적 교류의 심화는 정부간 보다는 민간베이스 혹은 경제적 실리에 입각하여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양안간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 경험, 교육, 관광, 친척방문 등 종류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정부차원의 단선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마비되어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어 양안관계의 최악의 상태, 즉 전면 중단상태를 초래하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중·대만 양국은 반관반민 형태의 기구를 활용,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며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실리는 물론 관광, 교육 등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더욱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차원의 협상에서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은 역사적으로 경험되고 실증된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포용정책과 중·대만간의 교류협력과 비슷한 기본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쇄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많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잠수정 침투사건 時, 한국은 북한 당국의 시인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국이 북한군의 시신을 송환하고 민간경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당근만을 제공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宥和政策」이 아니며, 위기위식 및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확신과 자신감에 기초하여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柔軟政策」(flexible policy)이다.³⁾

Ⅲ.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 및 주변국의 반응

1. 북한

북한은 아직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남 적화를 통한 통일실현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반 회의반의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남한에서 변화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남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대남관계 개선을 천명한 적도 있었다. 금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우리측에 反北對決 정책을 聯北和解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과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성없는 콘크리트 장벽 철파,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경 비료회담을 위한 차관급회담 등 당국간회담이 진전없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우려, 즉 교류협력이 많으면 흡수통일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국간회담이 진전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잠수정사건, 무장간첩 침투사건, 북한의 미사일발사 사건 등으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잠수정 사건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이후 북한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평양방송(98.7.26)은 우리의 햇볕정책이 “북침을 노리는 정책을 숨기고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햇볕정책이 대북 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인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 대북 식량지원, 경수로 사업 등과 같은 대북 경제지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으나, 당국간 회담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 될수록 유일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자력갱생체제에서 ‘강성대국’ 체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보수적인 군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현 한반도 상황을 경제·안보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³⁾ 북한이 햇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햇볕정책이야말로 자신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대미·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남한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3) 민족통일연구원, 「햇볕정책」, 1998. 9.

4) 제5차 한중미래포럼 회의결과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 1998. 10. p. 6.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한정 대남 정치 및 군사적 대결을 지속한다면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이 요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햇볕정책의 의도와 입장을 이해하고 남북한 교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점진적, 단계적, 상호 호혜에 바탕을 둔 유연한 햇볕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변국들의 반응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자국의 대북 정책기조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즉 북한의 무력도발이 억제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대북정책 접근에 대한 방법은 서로 달리하면서도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권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철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가. 미국

미국은 「미·북제네바 핵합의」(1994.10.21) 이후 북한의 핵합의 준수를 전제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민간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점차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대북 정경분리정책을 남북한 현실에 매우 적합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햇볕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의회 지도자들 또한 북한과의 관계진전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될 때에만 실질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융통성있는 대북정책에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금년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1998.6.9)에서 미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의 성실한 핵합의가 이행되는 조건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화 4자회담의 병행 추진과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을 합의하는 등 한국의 햇볕정책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였다. 미의회는 금년 10월 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수출 중단을 검증하는 선에서 대북 3,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하는 등 북한을 포용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주변 강국들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고, 북한을 자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초로 삼아 왔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 요인은 전쟁과 주변 강대국 그리고 어느 한쪽의 붕괴라고 언급하고 소규모 충돌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없고 남북한 어느 쪽도 상대를 침략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붕괴할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경제난 극복이 더욱 어려워져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남북한 무력충돌이나 탈북주민들의 대규모 중국 유입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98년 6월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시 발표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특히 한국의 햇볕정책과 4자회담을 지지하였으며, 6월말 미국과의 북경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중국의 고위관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희망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햇볕정책'(陽光政策)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또한 중국은 금년 10월 13일 북한에 8만톤의 원유를 무상지원키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하고 있다.⁶⁾

중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건을 한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국제압력'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안전 상정 자체를 반대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 미사일 사건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미사일 발사사건은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북한주민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김정일의 추대행사의 일환)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주장인 북한의 대내외적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안보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한국측 주장인 군사정전협정 유효, 북한의 4자회담 참여 권유 등을 지지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필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위협적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현상유지차원에서 남북 대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 즉 안보

5) 제5차한중미래포럼, 국제교류재단, 6.

6) 평양방송, 1998. 10. 14.

와 화해협력의 병행정책이 일본의 대북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역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대일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당국의 일본인 납치의혹, 일본인 처 고향방문, 북한의 미사일발사 사건 등으로 일본 여론이 보수화됨으로써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이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수로사업협정 서명 유보는 조만간 철회되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라. 러시아

러시아가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소 수교(1990.9) 이후 한국 중심의 한반도정책을 수행하였던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투자 부진과 차관제공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4자회담에서의 소외 등으로 한반도정책을 재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반도 안정,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통일 등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통일보다는 남북한간의 평화를 중시하고 있듯이 러시아도 자국의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간 대화를 통한 상호불신 해소와 협력확대로 평화적,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달성을 예측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일·중·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남북대화와 남북한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어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중시하여 정부차원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지원을 위한 비정기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햇볕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 실상, 대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법에 대하여 폭 넓은 토론과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 학계 및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법제정 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IV. 언론, 학계 및 정부의 역할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높으나, 북한관련 정보의 폐쇄성, 대국민 통일정책 홍보, 교육부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언론, 학계,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

7) 金原主行, 21世紀政策研究所, 민족통일연구원, 간담회 발표의견, 1998. 10. 14.

1. 언론 및 학계의 역할

정부의 햇볕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민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언론 및 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탈냉전이후 한국의 언론계와 학계에서 '통일언론'⁸⁾이라는 특수한 여론 형성층이 생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직도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다각적인 면과 중복된 보도, 극단적 보수화 경향, 첩보성 보도 증시 경향, 검증되지 않는 학술논문, 정책제시 등으로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과거 역대 정부때에는 통일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보다 분별력 있는 보도나 분석이 많지 않았으며, 북한이라는 대상의 특수성, 정치적 제약성, 정부의 통제, 각종 반공관련 법규 등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몇가지 고정된 시각과 범위 안에서 북한을 소개하고 분석한 데 연유한다. 원우현 교수는 한국의 통일정책의 변화과정과 한국언론에 반영된 대북한 보도경향을 의미있게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한국언론의 보수성과 정부의 통일논의에 관한 창구 단일화정책 등으로 인해 남북관련 보도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거나 군축,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등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남북한 체제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한국의 체제우월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⁹⁾

향후의 통일논의는 반공우선주의적 보도 기준보다는 민족번영, 화해협력 등을 조성하는 공개적인 국민참여적 자세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정부가 남북한 학계, 언론기관, 민간단체 등 비정치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권장하고 있어 올바른 통일언론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의 이질감을 완화시켜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언론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통일 관련 언론 프로그램 제작시 우선시 해야 할 가치관은 북한 정권을 독립적인 체제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인식 하에 실상을 전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중요하기는 하나, 이들 자료에만 의존하는 제작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여건상 북한접근 불용이성, 부족한 투자액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제작인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자유로운 정보활동 보장과 언론사(방송사 포함)의 통일방송 전문인 수급, 재정적 뒷받침 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소위 보수와 진보간의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일점을 찾는 노력에 언론과 학계가 일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화, 근대화, 미래지향적 성향을 띤 여러 각계 각층의 정당사회단체의 참여하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화협'에 언론 및 학계의 많은 진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박기순·전리명, 「한국 신문에 반영된 북한 '이미지」, 소화, 한림과학총서 25, 1995. 12. 통일언론이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언론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현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와 그 역할을 말한다.

9) 원우현, "남한언론매체와 한국의 통일", 미사회과학협의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0. 11. 17.

학계에서 주로 통일논의와 북한실상을 심층 분석하는 곳은 대학부설 통일문제(남북문제)연구소들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약 80여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대학이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가장 많이 산재해 있다. 이들 연구소는 특히 자체 연구계획에 따라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소들은 남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학술회의를 통한 남북한 민간 학술교류와 협력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¹⁰⁾ 통일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고 제시되는 것은 좋은 점이나, 대학연구소가 갖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통일논의에 보다 현실성있는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계의 통일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

첫째, 통일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주요 국책연구기관 등(예 : 민족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등)과의 인적, 학술적 연계(network)가 필요하다. 특히 학계와 국책연구기관과의 상호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동(지역별, 시기별로 실시)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일정책개발을 위한 중복성 연구를 지향하고 통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문제나 남북문제를 담당할 교수나 교사를 적극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다양한 통일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교재, 부교재 등을 개발하여 학생,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교육과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내 통일 전문학술 연구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¹⁾

셋째, 나아가 대학연구소가 북한·통일관련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와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는 증진되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해서도 교과서 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교과서에 남한을 왜곡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하는 사업과 동시에 남한의 교과서 역시 북한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상호 시정하는 남북한 교과서 시정작업을 남북한 학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¹²⁾

특히 북측에 대한 도발억제와 협력증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학계가 지역사회에 적극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여 북한의 편협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민간 국제기구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한

10) 예를 들면, 극동문제연구소(경남대), 통일연구원(연세대), 통일문제연구소(경상대, 서경대, 여수대, 충남대), 평화문제연구소(경북대, 고려대), 사회과학연구소(서울대, 순천향대, 순천대), 현대이념연구소(군산대), 동국대(안보문제연구소) 등으로 서로 다른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11) 이우영, "통일대비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 1997. 10, p. 68~73.

12) 한만길, "북한 통일교육의 실상과 문제", 통일한국, 1998. 5, p. 70~71. 북한교과서는 한국에 대해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로서, 남한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이고, 남한의 통치배들은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괴뢰 도당이다. 남한 지배세력은 남한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서술하고 있다.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역할

교류·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은 양측의 당국과 민간단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부차원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민간이나 반관반민 형태의 교류·협력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불신이 존재하는 데는 한국의 실상과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지도급 인사들의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부족한 데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

첫째, 우선 남북한간의 비정치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많이 권유하고 지원하여 여러분야의 북한 지도급 인사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남북한간에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높으나, 북한관련 정보의 폐쇄성, 대국민 통일정책 홍보와 교육의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이 형성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언론기관 및 학계가 수행하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통일교육 방향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의 성사를 위해 통일교육 활동을 촉진·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가능한 한 북한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함과 동시에 언론과 학계와의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국들은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지지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일부 식자층의 인식부족으로 국론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